

---

# 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

---

2020. 9. 1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

# 순 서

I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.....	1
II. 경제·재정운용 여건 .....	2
III. 2020~2024년 재정운용 방향 .....	6
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10
V. 재정혁신 방향 .....	13
[참 고]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22



---

---

## I.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

---

---

-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-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·보완
- '04년 최초 수립('04~'08년 계획) 이후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- 국가재정법 개정('14년)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)
-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
- 분야별 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운영, 국가재정전략 회의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

### 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·운영 ('19.10월~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19년말)  
\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0.1월말)
-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('20.5.25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('20.7.20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('20.8.4)
-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0.8.25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('20.9.3)

## II. 경제·재정운용 여건

### 1 대내외 경제 여건

#### 세계경제

- (2020년)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
  - 하반기에는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와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상반기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부터 완만한 회복 예상
    -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 보다 먼저 확산·소강을 경험하면서 2/4분기에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반등
- \* 中 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6.4 (2/4)6.2 (3/4)6.0 (4/4)6.0 ('20.1/4)△6.8 (2/4)3.2
- 다만, 신흥국 확산세 지속 및 미·유럽 등 선진국 재확산 추세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 우려
- (2021년 이후)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, 불확실성도 잠재
  - 미국·유럽 등 선진국은 글로벌 이동성 회복, 이연수요 표출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
    - 신흥국도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 예상
  - 다만,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, 주요국간 통상 갈등,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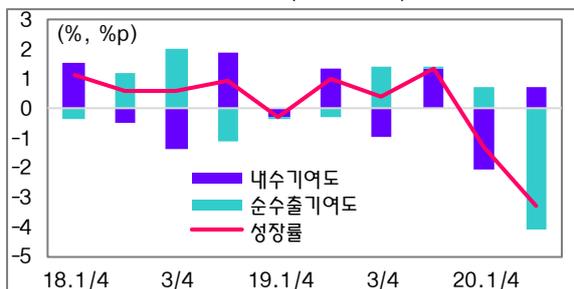
	'19	'20	'21
세 계	2.9	△4.9	5.4
- 선진국	1.7	△8.0	4.8
- 신흥국	3.7	△3.0	5.9

\* 출처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'20.6월)

## 국내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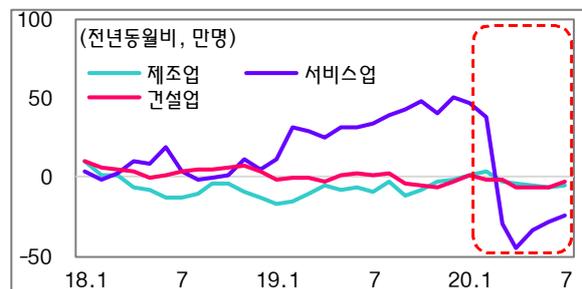
- **(2020년)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**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
  -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, 추경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 예상
    - 다만, 최근 국내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및 글로벌 확산세 지속, 대규모 수해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
  - 고용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충격에서 점차 회복 예상
    - \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20.1/4)28.8 (4)△47.6 (5)△39.2 (6)△35.2 (7)△27.7

GDP 성장률(전기비) 추이



\* 자료 : 한국은행

산업별 취업자 증감



\* 자료 : 통계청

- **(2021년 이후)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**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, 구조적 변화 대응 노력 강화 필요
  -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·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전망
    - \* '20→'21년 세계경제 전망(% , IMF) : (성장)△4.9 → 5.4 (교역)△11.9 → 8.0
  - 다만,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,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·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\*도 가속화 예상
    - \* 비대면·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, 저탄소·친환경경제 요구 증대, 양극화 심화 우려 등

## 재정수입

- 코로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재정수입(총수입)이 당초 '19~'23년 계획 상의 예측 경로에 상당수준 미달할 전망
  - (국세수입) '20~'21년 증가폭 둔화에 따라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'20~'24년 연평균 증가율은 '19~'23년 계획에 못 미칠 전망
  - (세외수입)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'19~'23년 계획 대비 감소 전망
    - 다만, 벌금,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수입 전망은 다소 유동적
  - (기금수입)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추세 감안시 '19~'23년 계획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 유지 전망

## 재정지출

- 코로나19 이후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성과 확산,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한 지출소요 확대 전망
  - (한국판 뉴딜)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·그린 뉴딜 투자소요 증가
    - 데이터댐, 지능형 정부 등 12개 디지털 뉴딜 과제와 그린 리모델링·친환경 모빌리티 등 8개 그린 뉴딜 과제 본격 추진

- (혁신성장)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BIG3(미래차·바이오·시스템 반도체)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소요 확대
- (경제활력)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소비·투자·수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필요
- (포용기반)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 소요 증가
  -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,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,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
- (인구변화) 보육·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과 노인 보건 의료·노후소득기반 확충 등 고령화 대비 투자소요 증가
- (국민안전) 자연·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, 생활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 확대
  - 감염병 전문병원·인력 확충,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확보, 백신·치료제 R&D 확대 등 감염병 방역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

'19~'23년 계획 대비 '20~'24년 부처요구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19	'20	'21	'22	'23	'24	증가율
▪ '19~'23년 계획(A)	469.6	513.5	546.8	575.3	604.0		6.5
▪ '20~'24년 부처요구(B)*		512.3	579.4	620.3	648.0	685.3	7.5
▪ 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		32.6	45.0	44.0		

\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('20.1월말)

### Ⅲ. 2020~2024년 재정운용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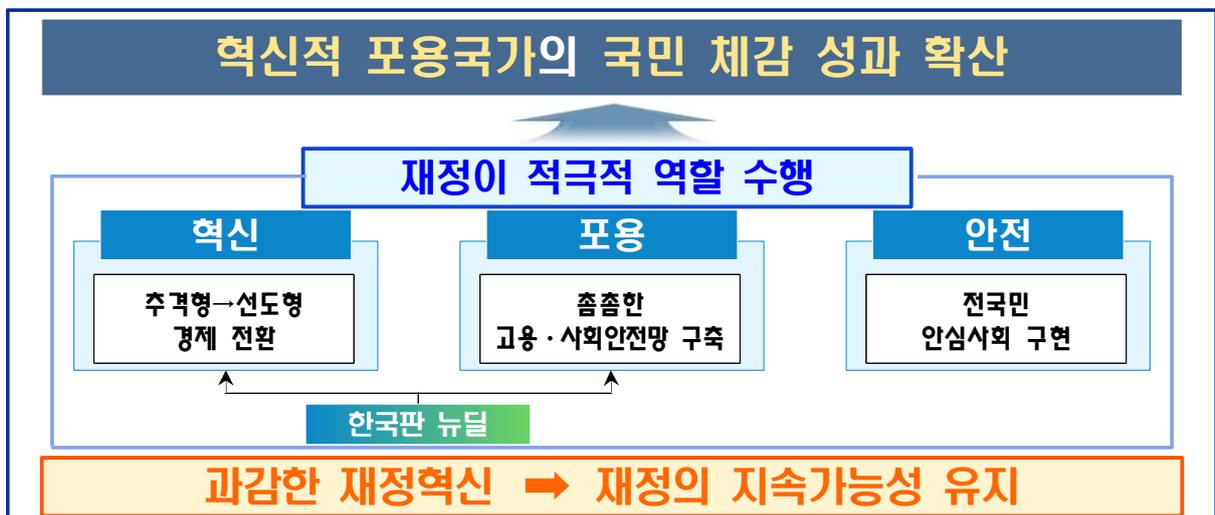
#### 1 재정운용 기본방향

□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

- (혁신)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,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경제역동성 회복
- (포용) 촘촘한 고용·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포용기반 확충
- (안전) 자연·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, 튼튼한 국방 및 한반도 평화경제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

□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·지속가능성 제고

-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을 핵심사업에 재배분하고 부처간 협업예산 활성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
- 성과관리체계 개편으로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고, 국가계약·조달제도 혁신 등을 통해 공정·혁신 가치 확산
- 과세기반 확대, 세외수입 확충, 국유재산 활용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 확충 및 다변화 노력 지속 추진



## 재정수입

- 재정수입(총수입)은 '20~'24년 기간 중 연평균 3.5% 증가할 전망
  - 국세수입은 '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'20·'21년 증가폭이 둔화되어,
    -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.8% 증가에 그칠 전망
  - 세외수입·기금수입은 연평균 2.0%, 5.0% 수준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0년*		'21년	'22년	'23년	'24년	연평균 증가율
	본예산	추경**					
▣ 재정수입	481.8	470.7	483.0	505.4	527.8	552.2	3.5
○ 국세수입	292.0	279.7	282.8	296.5	310.1	325.5	2.8
○ 세외수입	27.9	29.1	28.6	28.9	29.9	30.2	2.0
○ 기금수입	161.9	161.9	171.6	180.0	187.8	196.6	5.0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\*\* 3차 추경 기준

- 조세부담률은 '20·'21년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증가 전망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0년*	'21년	'22년	'23년	'24년
▣ 조세부담률	19.3	18.7	18.8	18.9	19.0
▣ 국민부담률	27.2	26.6	26.7	27.0	27.3

\* 3차 추경 기준

## 재정지출

- 재정지출(총지출)은 '20~'24년 기간 중 연평균 5.7% 증가할 전망
  -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 확산 등을 위해 '21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,
    -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
- 의무지출은 '20~'24년 기간 중 연평균 5.3% 증가
  -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
- 재량지출은 '20~'24년 기간 중 연평균 6.2% 증가

### 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0년*		'21년	'22년	'23년	'24년	연평균 증가율
	본예산	추경**					
■ 총지출	512.3	546.9	555.8	589.1	615.7	640.3	5.7
(증가율)	(9.1)	(16.5)	(8.5)	(6.0)	(4.5)	(4.0)	
○ 의무지출	255.6	255.1	267.3	282.5	295.7	314.2	5.3
(비중)	(49.9)	(46.7)	(48.1)	(48.0)	(48.0)	(49.1)	
○ 재량지출	256.6	291.8	288.5	306.6	320.0	326.1	6.2
(비중)	(50.1)	(53.3)	(51.9)	(52.0)	(52.0)	(50.9)	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\*\* 3차 추경 기준

##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(재정수지) 세입기반 약화, 지출소요 확대로 '24년 관리재정수지는  $\Delta 5\%$  중반 수준 예상

- '23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 $\Delta 5\%$  후반 수준으로 확대되나,
  - '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하여 수지적자 비율을  $\Delta 5\%$  중반 수준까지 축소

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\*는 '24년 기준 GDP 대비  $\Delta 3.9\%$  수준으로 관리

\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보기금(국민, 사학, 고용, 산재) 수지

□ (국가채무)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 속도(폭)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'24년  $50\%$ 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 노력

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0년*		'21년	'22년	'23년	'24년
	본예산	추경**				
▣ 관리재정수지	$\Delta 71.5$	$\Delta 111.5$	$\Delta 109.7$	$\Delta 123.2$	$\Delta 128.2$	$\Delta 127.5$
(GDP대비, %)	( $\Delta 3.5$ )	( $\Delta 5.8$ )	( $\Delta 5.4$ )	( $\Delta 5.9$ )	( $\Delta 5.9$ )	( $\Delta 5.6$ )
※ 통합재정수지	$\Delta 30.5$	$\Delta 76.2$	$\Delta 72.8$	$\Delta 83.7$	$\Delta 87.9$	$\Delta 88.1$
(GDP대비, %)	( $\Delta 1.5$ )	( $\Delta 3.9$ )	( $\Delta 3.6$ )	( $\Delta 4.0$ )	( $\Delta 4.0$ )	( $\Delta 3.9$ )
▣ 국가채무	805.2	839.4	945.0	1,070.3	1,196.3	1,327.0
(GDP대비, %)	(39.8)	(43.5)	(46.7)	(50.9)	(54.6)	(58.3)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 / \*\* 3차 추경 기준

## 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◇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복지·고용분야 투자 확대 추진
- ◇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해 R&D·산업·중기분야 적극 지원
- ◇ 교육·농림분야 등은 중점지원 및 내실화 부문을 균형있게 고려

### 1 사회 분야

- **촉촉한 고용·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,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저출산·고령화 대응투자 강화**
  - **(일자리)**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,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·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**고용안전망 확충**
    - 유사·중복, 저성과 사업, 한시적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재투자하여 일자리 예산의 성과 제고 도모
  - **(복지)** 저소득·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서비스 및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
    - 돌봄·보육, 노후 소득보장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투자 확대
  - **(환경)**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, 친환경차 보급 등 그린뉴딜 집중 투자 및 환경산업 기반조성
    - 수질개선시설 등 환경인프라 투자는 신·증설에서 안전·개량 중심으로 전환
  - **(교육)** 학령인구 감소,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연령대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
    - 국립대 육성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간 연계·조정을 검토하고, 장학금, 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 교육·주거비 경감노력 지속
  - **(문화·체육·관광)**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, 국민들의 기초 문화·체육생활기반 확대

## 2

## 경제 분야

-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동력 확충
    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벤처·창업을 집중 지원하고, 시스템반도체·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전략 육성
      -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비
    - (SOC) 노후화에 따라 SOC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, 생활SOC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및 차세대 교통·주거 인프라 구축 확대
      - 도로, 철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시 수익자부담, 지자체 책임성 강화 원칙에 입각해 정부-지자체-민간의 역할분담방안 모색
    - (농림·수산)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어업 확산 및 청년 농·어업인 육성·정착 적극 지원
      -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재해예방·완공소요 중심 적정 투자로 전환
    - (R&D)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, D·N·A\*, BIG3\*\* 등 신기술·신산업 분야 R&D 투자 확대
- \* 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/ \*\* 미래차·바이오·시스템반도체

## 3

## 행정 분야

-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,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한 국민안전 투자 확대
  - (국방) 병역자원 감소, 핵·대량살상무기 위협 증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군 육성, 첨단무기체계 개발·도입 집중 투자
  - (외교·통일)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다자외교 지원을 강화하고, 재외국민 보호 및 한반도 평화경제기반 확충 지원
  - (일반·지방행정)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투자를 확충하고,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 지원 강화
  - (안전) 신종감염병, 산업재해 등 안전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고, 재난·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

**< 2020~2024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**

(단위 : 조원,%)

구분	'20	'21	'22	'23	'24	연평균 증가율
<b>총 지출</b> (증가율)	<b>512.3</b> <b>(9.1)</b>	<b>555.8</b> <b>(8.5)</b>	<b>589.1</b> <b>(6.0)</b>	<b>615.7</b> <b>(4.5)</b>	<b>640.3</b> <b>(4.0)</b>	<b>(5.7)</b>
<b>1. 보건·복지·고용</b>	180.5 (12.1)	199.9 (10.7)	217.4 (8.8)	230.2 (5.9)	242.7 (5.4)	(7.7)
<b>2. 교육</b>	72.6 (2.8)	71.0 (△2.2)	74.2 (4.4)	75.4 (1.6)	77.9 (3.4)	(1.8)
<b>3. 문화·체육·관광</b>	8.0 (10.6)	8.4 (5.1)	8.8 (4.7)	9.2 (4.0)	9.4 (3.0)	(4.2)
<b>4. 환경</b>	9.0 (21.8)	10.5 (16.7)	11.4 (8.3)	12.1 (6.1)	12.6 (4.0)	(8.7)
<b>5. R&amp;D</b>	24.2 (18.0)	27.2 (12.3)	29.1 (6.9)	30.7 (5.4)	32.0 (4.3)	(7.2)
<b>6. 산업·중소·에너지</b>	23.7 (26.4)	29.1 (22.9)	32.3 (10.9)	34.2 (5.8)	35.6 (4.0)	(10.7)
<b>7. SOC</b>	23.2 (17.6)	26.0 (11.9)	27.8 (6.8)	28.7 (3.4)	29.3 (2.0)	(6.0)
<b>8. 농림·수산·식품</b>	21.5 (7.4)	22.4 (4.0)	23.0 (2.7)	23.3 (1.3)	23.5 (1.1)	(2.3)
<b>9. 국방</b>	50.2 (7.4)	52.9 (5.5)	56.1 (6.0)	58.6 (4.5)	60.9 (4.0)	(5.0)
<b>10. 외교·통일</b>	5.5 (8.8)	5.7 (4.3)	6.0 (4.0)	6.2 (4.0)	6.5 (3.9)	(4.1)
<b>11. 공공질서·안전</b>	20.8 (3.5)	21.8 (4.4)	22.8 (4.8)	23.7 (4.1)	24.6 (3.4)	(4.2)
<b>12. 일반·지방행정</b>	79.0 (3.2)	86.5 (9.5)	87.6 (1.3)	92.0 (5.0)	94.9 (3.2)	(4.7)

---

---

## V. 재정혁신 방향

---

---

###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

---

---

#### 지출 구조조정

---

-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
  -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, 유사·중복, 저성과,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
    -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
  - 관행적 출연·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
    -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\*, 보조금 수급관리 인프라 확충\*\* 등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-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

\*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강화

\*\* 통합수급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등

---

## 지출구조 개선

---

- 재정사업 평가제도\*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

\* 재정사업자율평가, 심층평가, 핵심사업평가 등

-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주기와 예산 순기간 일치, 이행점검 강화 등 추진

- 인구·사회·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

---

## 협업예산 활성화

---

- 부처간 연계·협력이 긴요하고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예산 확대 추진

-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주기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유사·중복사업 정비, 국민체감도 향상 등 재정투자 성과 제고

- 전문적 분업형·사업주기별 협력형·수요자 맞춤형 등 유형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재정 전반으로 확산

- 우수 협업과제는 필요 소요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
## 비과세·감면 정비

- 경제활력 회복,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, 성과평가 내실화 등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
  - 기존 비과세·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 적극 검토
  - 부처별 자율평가 내실화,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지속 보완

## 탈루소득 과세 강화

- 역외탈세 과세 및 고액·상습채납자 채납 관리 강화
  -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**OECD BEPS\***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 지속 추진
    - \* Base Erosion & Profit Shifting: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
  -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, 디지털 경제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
  - 채납액 납부 촉진을 위해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

---

## 재원의 효율적 활용

---

- 칸막이식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
  - 기금별 여유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전출 등을 포함한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
- 소규모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맞춤형 통합운용 지원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
  - 자산배분전략 수립, 투자의사 결정,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 전주기를 연기금투자플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

### 3 투자자원 다변화

---

---

## 민간투자사업 활성화

---

-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필수기반시설 조기 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원
  - 도로·철도 등 기존 유형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, '한국형 뉴딜' 등의 새로운 유형\* 사업에 민자방식 적용 검토

\* '포괄주의' 도입('20.3월 민투법 개정)으로 민자 추진가능 대상시설 확대 (종전) 도로·철도·항만 등 53개 유형 → (변경) 모든 경제·사회기반시설 및 공용·공공용시설

- 세제혜택, 규제완화, 사업참여 우대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유도
- 민간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사전절차 동시 진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기간 단축

---

## 국유재산 활용 확대

---

-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·활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도모
  -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
  -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 SOC를 확충하고 노후 청·관사 복합개발\*도 지속 추진
    - \* 청·관사 + 수익시설 + 공공임대주택
  - 유휴 행정재산 및 국유재산 특례 관리를 강화\*하고,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
    - \*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 확립 및 일몰제·존치평가 도입(특례제한법 개정 추진)

## 4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

---



---

###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

---

- 장래 인구구조 변화,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
- 전망 결과를 토대로 연금·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

□ 재정준칙 및 보완지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강화

-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 검토
- 재정상황과 국민부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재정수지, 순채무 등 보완지표 도입 검토

---

## 국고채 안정적 관리

---

□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춰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,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 추진

- 대·내외 경제상황, 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·연물별 국고채 발행물량 적정 배분
- 국고채 전문딜러 인수여력 보장\*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

\* 국채 인수실적을 중심으로 PD평가 강화, PD 비경쟁인수 확대 등

□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변동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 노력 강화

-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 실시, 중·장기물 발행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함으로써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
- 주기적 교환을 통해 국채 유동성 제고 및 시장거래 활성화
-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

## 성과관리제도 개편

-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
  - 성과계획서·보고서 관리대상을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성과관리의 거시적·전략적 기능 강화
  - 제도별 평가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한편, 평가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는 강화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
  -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체계화,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-Brain)에 재정성과DB 구축 등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추진

##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

- 국가채권·증권·토지·건물 등을 포괄하는 국가자산 개념 정립
  - 국가자산 정의와 연계하여 현재 관리 공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\*하여 제도적 관리기반 마련
    - \*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→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
-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기능 강화
  - 차세대 dBrain 구축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등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\* 추진
    - \* 과징금 출자전환 미등재 등 개별부처 관리 소홀 → 국유증권 관리 일원화
  - 국유재산 특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자산 손실 최소화
    - \* 국유재산 특례 신설 시 사전심사, 특례 일몰제도 도입 등 총량 관리 강화

---

##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

---

- 혁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구매를 통해 민간 기술혁신·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개선
  - 패스트트랙 I·II\*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혁신제품의 풀(pool)을 넓히는 한편, 패스트트랙III\*\*를 신설하여 혁신제품 범위 추가 확대
    - \* (FT1/FT2) 정부R&D성과물/상용화前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 지정
    - \*\* (FT3) 신기술·신제품(NET·NEP), 우수특허제품, 공공기관 기술마켓 제품 중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분명한 제품 및 그밖에 지정 필요성 인정 제품 등을 지정
  - 혁신구매목표제\*를 기관평가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조달 본격 추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\*\*
    - \*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%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
    - \*\* 혁신조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「조달정책심의위원회」 출범

---

## 공공계약제도 개선

---

-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계약 절차의 효율성·공정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
  - 민관 합동 「계약제도 혁신TF」 운영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제도의 유연화·절차 간소화 추진\*
    - \* (공정성)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 회피 금지,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(효율성) 카탈로그계약 도입, 신기술 인증제품 수의계약 기간 완화 등
- 혁신기술·신산업 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 강화
  - 新산업에 특화된 계약제도 도입\*, 창업·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기술·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
    - \*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최적화된 계약제도 신설, 기술·콘텐츠 평가 강화 등

##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

- AI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, 재정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추진
  - 차세대 dBrain을 통해 중앙·지방·교육 3대 재정시스템 및 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 재정정보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
  -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국가 전체 재정정보와 산재된 수혜자 재정정보\*를 「열린재정」에서 **One-Stop**으로 맞춤형 공개
    - \* 복지로(복지서비스), 나라도움(보조금), 정부24(공공서비스), 교육지원한눈에(교육) 등

##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·확산

-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 강화 및 연간 상시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
  -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대면숙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예산국민참여단 운영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도 확대\*
    - \* ('19년) 4백명 → ('20년 이후) 2,000여명
  - 상시 제안접수, 토론 이슈 확대 및 국민 대상 이슈 선정투표 진행 등 참여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
  - 정책제안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\*하는 한편,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제안·예산편성·집행 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
    - \* 광화문 1번가, 도전한국 등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 중 참여예산 사업 발굴 추진

**(1)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**

-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
  -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'22년까지 폐지\*하고,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속 확대
    - \* '21년 노인, 한부모 가구→ '22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(고소득고재산가 제외)
  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 주거급여 개선,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 신설 등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추진
-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촘촘한 보육·돌봄 인프라 구축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
  - 공공보육·초등돌봄\*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, 신혼부부·청년 공적임대주택 확대 지속 추진
    - \* 공공보육 40% 달성('22), 초등돌봄 아동 53만명 달성('17년 33 → '22년 53만)
  - 기초연금 확대(소득하위 70% 전체, 25→30만원), 디지털돌봄 시범 사업 도입 등 노인 소득기반 및 돌봄지원 강화
- 장애인 및 소외 아동·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포용성 강화
  - 장애인연금 인상\*, 장애인활동지원 확대, 경제적 자립·근로참여 등을 통해 장애인 3대 애로요인(생계·일상생활·일자리) 경감
    - \* (장애인연금) '19년 기초수급 → '20년 차상위 → '21년 소득하위 70% 전체
  - 확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대 및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신설 등 아동·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
-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육성 지원
  - K-방역 고도화\* 및 글로벌 선도를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협력체계, 의료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
    - \* (예) 사전예방(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), 진단치료(호흡기전담 클리닉,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)
  - 데이터중심병원·스마트병원 등 바이오-ICT융합을 촉진하고, 제약·의료기기·뷰티 분야 인프라·인재양성 투자\*로 가시적 성과 창출
    - \* (예)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건립, K-뷰티 피부유전체 분석, 한국형 NIBRT 본격화 등

## **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중점 투자방향**

-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
  - 두루누리사업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종료하고, 예술인·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신규 적용자 위주로 지원
  -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자 대상 구직급여 신규 지원
  -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\*를 통해 구직·생활안정 지원
    - \* 구직 촉진수당 및 상담·직업훈련·일경험 연계 등을 통해 구직 지원
-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및 고용서비스 질(質) 제고
  -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및 공공·민간훈련기관 인프라 개선
  - 취업취약계층, 일자리함께하기, 신중년, 유턴기업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 장려금 지원
  - 고용센터 인력 보강 및 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질 제고
- 산업현장 안전 확보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
  - 미인증 고위험기계·기구 교체, 위험공정 개선,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 교체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 도모
  - 시간선택제, 유연근무제, 육아 휴직·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사업주 지원 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유도

## [2] 교육 분야

-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
  -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지자체-대학 협력 플랫폼 구축
  - 디지털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·공유하고,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도 공개
-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
  - 노후 학교건물을 그린스마트 스쿨(친환경+디지털)로 전환하고, 수준별 학습 진단시스템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
  - 직업교육 - 선취업 - 후진학 성장경로 확립으로 고졸인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
-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 확대
  -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연장하고, 고교 무상교육(20년 고2·3→21년 소학년)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출발선 보장
  - 대학생 근로장학금·후진학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·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
  - 화재·전도위험 외벽 교체, 석면제거, 내진보강, 노후시설 보수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
-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
  - 언제나, 어디서나, 누구나 대학 수준의 학습이 가능한 “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” 확대 추진
  - 학생·연구자가 365일, 24시간 학술정보에 자유롭게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 DB 구독 지원 확대
  - 저소득층·문해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

### [3]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 '한국판 뉴딜'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
  - VR·AR 기반 실감콘텐츠 및 OTT 등 新유형 디지털콘텐츠 제작, 비대면·온라인 서비스 도입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
  - K-pop·게임·영화 등 핵심 문화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
-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신한류(新韓流) 진흥·확산
  - 전통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우리문화 쏠 영역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
  - 소비재·서비스 산업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위한 연계행사·협력마케팅 등 추진
- 소외·취약계층 대상 문화 향유기회 확대
  -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상향('20년 9만원 → '21년 10만원)하고,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·용품 지원 등도 확대
-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
  - 지역관광거점도시(광역 1개, 기초 4개)를 조성하고,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
  - 해외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 교통·숙박·볼거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
  - 관광벤처기업 지원 등 관광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력 제고
-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확대
  - 여성·청소년·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
  -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, 2032하계올림픽 유치 등 차질없는 국제대회 유치·준비 지원

#### [4] R&D 분야

- 관리품목 확대 등 소재·부품·장비 자립화 촉진을 위한 투자 강화
  - 기존 **100대** 품목의 자립화 및 공급 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관리품목 확대(100개 → 338개)
  -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신소재, AI·에너지·바이오 등 첨단 유망 소재·부품 개발도 적극 추진
  
-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R&D 투자 강화
  - D·N·A\*, BIG3\*\* 등 신기술·신산업 분야 R&D 지속 투자  
\* 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/ \*\* 미래차·바이오·시스템반도체
  - D·N·A기반 정보보안, 비대면 산업,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유망 신기술 R&D 투자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적극 뒷받침
  - 제로 에너지화, 생태 복원, 저탄소 에너지,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산업 기술 R&D 투자 확대
  
- 지속가능한 국가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
  -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신·변종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·치료제 개발 및 방역물품·기기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
  - 신약·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R&D 중심으로 쏠주기적 지원(기술개발→임상·실증→제품화)
  
- 기초·원천연구,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
  - 미래 과학기술역량 및 우수인력 성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창의·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지원 확대
  - AI·SW, BIG3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고급인재 양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인재 인프라 투자 확대

## (5)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  - 무역금융 보장, 비대면·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, 해외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총력지원
  - 바이오·로봇·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력양성, 사업화·실증 등 지원 확대
-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하여 제조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
  - 스마트 산단, 스마트공장 보급·고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
  -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및 특구 입주 기업 대상 **R&D**, 사업화, 인프라 지원 강화
-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·사업화·인프라 지원 강화
  -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 벤처시장 마중물 공급 지속
  - 비대면·디지털, **BIG3** 등 유망분야 전용 창업사업화 패키지 확충 및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**TIPS** 지원 확대
  - 창업기업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파크 등 구축 지원
- 자영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스마트 혁신 지원 강화
  - 지역신보 보증 확대 및 재해·위기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확대
  - 소상공인 스마트 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, 스마트공방, 스마트슈퍼 보급 및 비대면·온라인 판로지원 대폭 확대
- 신재생에너지·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
  -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등 태양광에너지 확산 및 아직 초기 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·**R&D**·입지 등 지원
  - 수소 생산기지 구축,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등 생산-유통-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 중점 구축
  -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및 노후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원

## [6] SOC 분야

### □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및 주요 간선망 지속 투자

-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, 출퇴근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해 GTX·진접선 등 광역철도망, 광역·혼잡도로 확충
  - 삼성역 복합환승센터(27년) 등 핵심 거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버스·철도 등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강화
-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세종-안성 고속도로(24년), 호남 고속철도 2단계(25년) 등 국가 주요 기간망 확충

### 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\*(총 25.4조원, '19.1월) 적기 완료 지원

- \* (도로) 제2 경춘국도, 세종-청주 고속도로, 울산 외곽순환도로, 국도 위험구간 등 7개 (철도) 남부내륙철도, 동해선 전철화, 석문산단인입철도, 대구산업선철도 등 8개
- 설계, 착공 등 쏠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\*을 집중 관리하여 차질 없는 준공 지원

\* [21년 진행단계] (도로: 7개) 설계 4, 착공 3 (철도: 8개) 설계 7, 착공 1

### □ 노후 SOC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

- 위험도로, 노후 교량·터널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매년 5조원 내외 투자

### □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

- 도로·철도, 공항·항만, 수자원, 재난대응 등 주요 SOC 분야에 IoT 계측기,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등 스마트化\* 촉진

\* '22년까지 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설치, 재해 高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(510개소) 등

## [7]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- 농어업인 소득·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
  - 농지보전·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 공익형 직불제 안착 도모
  -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,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, 부채농가 경영희생지원 지속 확대
  - 농어민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어촌뉴딜 300사업 등 도시민의 휴양·관광 수요도 충족하는 열린 농어촌 개발 추진

\* 어촌뉴딜 300(개소, 누적): ('19) 70 → ('20) 190 → ('21) 250 → ('22) 300

-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
  - 채소가격안정제와 의무자조금 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
  -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여 농·축산물 온라인·비대면 유통 플랫폼 지원
-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지속
  - 스마트농어업 확산·고도화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 전문인력도 육성
  -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 및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
- 재해예방 및 한국판 뉴딜 소요 중심으로 농업 SOC 적정 투자
  - 신규 수리시설 설치의 속도를 조절하되,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농업 SOC 투자 강화
  - 농업용 저수지 원격수문제어 시스템 구축, 수질관리 자동화, 제방 붕괴 사전 계측 등 SOC 디지털 투자 확대

\* 물관리 자동화율 : ('21) 67% → ('25) 100%

\*\* 붕괴 사전계측기 설치(누적, 3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)  
: ('20) 30 ('21) 200 ('29) 960개소 완료

## [8] 환경 분야

-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환경·경제 가치 창출
  - 미세먼지·먹는물·기후변화 등의 재정투자 및 기준 강화가 관련 산업 성장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확대
  - 녹색기술 개발,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
  
-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 체감 성과 제고
  - 산업·발전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수송부문은 중대형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등 배출 기여율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
  -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,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와 함께 중소·영세 사업장 지원사업 확대
  - 과학적 측정·분석 및 촘촘한 배출 감시·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·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 강화
  
- 기후변화 대응, 자원순환 촉진 등 지속가능성 강화
  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축 사업 추진 및 폭염·한파 등에 취약한 지역·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
  - 폐기물의 생산·소비 단계 원천적 감량, 재활용 시장·산업 활성화, 처리단계 공공 안전망 강화 등 자원순환성 제고
  
-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서비스 혜택 확대
  - 도시·도시외 지역의 생태축 복원 및 연결성 강화,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,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용량 향상
  - 취약계층 무장애 탐방 인프라 확충,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탐방문화 촉진 등 계층·연령·지역별 맞춤형 생태서비스 제공

## [9] 국방 분야

### □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

#### ○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를 위한 감시·정찰 전력 확보

\* 군 정찰위성,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, 항공통제기(2차) 착수

#### ○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핵심 전력 보강

\* 대형수송함-Ⅱ, 공지통신무전기, 드론봇 체계 등 군구조 개편 전력 중점 반영

#### ○ 실효적 우주역량 기반 강화 및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고도화

\* 우주기상 예·경보체계 개발, 군위성통신체계-Ⅱ(양산) 착수

#### ○ 핵·WMD 대응능력 확보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 환경 구축

\* 보라매사업, 광개토Ⅲ Batch-Ⅱ, 장보고-Ⅲ Batch-Ⅱ 본격 추진

#### ○ 신규 무기체계 후속지원 강화로 현존전력 운용능력 극대화

### □ 군 구조 정예화 및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

#### ○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인력 및 부대구조 정예화

#### ○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운영 및 교육훈련 확대

### □ 안전하고 건설적인 국방환경 조성

#### ○ 병 봉급을 '22년까지 '17년 최저임금의 50% 수준으로 인상

\* 병장기준 ('20) 54.1만원 → ('21) 60.9만원 → ('22) 67.6만원으로 인상 계획

#### ○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장병자기개발 지원 확대

#### ○ 노후 조립식 생활관을 개선하고 침상구조의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

## [10] 외교·통일 분야

- 핵심 외교정책 기조 지속 지원 및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실현
  -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4강 등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신남방 등 신흥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
  -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소통과 참여의 공공외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외교 인프라 확대·강화
  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활동 강화, 사건사고 인력확충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확대

\*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'21.1.16. 시행 예정
- 보건 분야·신남북방·융합프로그램 등 국익을 위한 전략적 ODA 확대
  - 기업 등 민간기관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 강화 및 글로벌 방역 선도국 위상 확립을 위한 보건 ODA 투자 확대
  - 신남방·신북방 지역\*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 중심으로 ODA를 지속 확대하여 동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

\* 신남방 : 아세안+인도, 신북방 : 몽골+중앙아시아

  - 동일 프로젝트에 여러 부처가 협업·연계하는 융합예산 발굴을 지속 확대하여 ODA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강화

\* 융합예산 분야: ①인프라구축(EDCF)+사후관리, ②시스템개선+기술지원, ③정책자문(KSP)+실증지원
- 남북관계의 복원·발전 및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확산
  -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, 인도적 협력, 작은 교역 등을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

\* 보건의료·재난재해·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를 발굴·추진하면서, 철도·도로 등 합의사항 이행 추진

  - DMZ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고,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협력 확대
  -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, 통일 정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활성화

## [11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- 아동학대·성폭력 피해자, 사회적 약자,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 강화
  - 학대아동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
  -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확대
  -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및 출소자 취업 지원 확대
- 정신질환 범죄자 및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전자감독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
  -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
  - 재범위험성이 높은 과거 전력자에 대한 1:1전담 전자감독과 보석·가석방된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
-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및 디지털·성 범죄 등 신종 범죄 대응 수사 장비 등 보강
  -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장비를 확충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도 강화
  - 디지털 성범죄, 온라인 도박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장비 보강 등 지원 강화
- 재해 예방투자·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
  -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교통사고·산업재해 등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
  - 화재, 지진, 홍수 등 재난 종류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대형·복합재난 대비 소방장비 등 확충

## [12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 - 청년 공동체 활성화, 청년 자립마을 전국 확대, 지역거점형 공동협력공간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 확대
  -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소비 등 경기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
  - 디지털 기업 중심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고, 지역공동체일 자리를 통해 생활방역 등 지역 일자리 수요에 대응
- 서해 5도, 접경권,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수상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지역발전 추진
  - 법정 중장기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
- 디지털 정부혁신 및 스마트 정부 구현 적극 추진
  - 행정·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전·전환을 지원하고, 공공데이터 개방·이용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및 민간수요 뒷받침
  - 정부업무 혁신을 위해 시민사회·전문가 등의 참여 플랫폼 다양화·활성화 촉진
-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정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책임있는 국가 구현
  - 주요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, 과거사 관련 조사 및 인식 제고, 트라우마 치유 등 지속 추진

## 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 야	지 표	'20년	'24년
보건·복지 · 고용	▪ 생계급여 수급자수(만명)	127	153+α
	▪ 기초연금 수급자수(만명)	568.8	696.2
	▪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(개)	-	3
	▪ 지역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(배)	1.27 (‘18년)	1.23
교 육	▪ 국·공립유치원 취원율(%)	28	40
	▪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생(만명)	86	124
	▪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(동, 누적)	-	2,302
	▪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(천명, 누적)	38	56
문화·체육 · 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29.1	162.3
	▪ 국내관광 총량(억 일(日))	4.4	6.7
R&D	▪ 4차 산업혁명 R&D(조원)	2.1	2.5
	▪ 중소기업 전용 R&D(조원)	2.3	2.4
	▪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(조원)	2.0	2.8
산업·중소 기업·에너지	▪ 스마트상점 구축 개소수(개, 누적)	6천	9만
	▪ 고압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(개, 누적)	40만	500만

분 야	지 표	'20년	'24년
SOC	▪ 국도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(km)	4천	14천
	▪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(동, 누적)	-	2,170
	▪ 수소도시 기반구축(지자체수)	3	6
농림·수산 ·식품	▪ 농업 저수지 관리 자동화율(전국 93개 권역, %)	71	89
	▪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(ha)	93	530
환 경	▪ 전기차 보급(천대, 누적)	170	847
	▪ 수소차 충전소(개소, 누적)	39	340
	▪ 초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축률(%) * 대책 기준년도인 '14년 배출량 기준	12.5	35.8 이상
국 방	▪ 전력운영비 중 후속군수지원 비중(%)	10.4	12.0
	▪ 방위력개선비 국내투자비율(%)	72.9	82.4
외교·통일	▪ 재외국민보호제도 만족도(점)	76.0	77.0
공공질서 ·안전	▪ 교정시설 과밀수용률(%)	110.7	100.0
	▪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(개소, 누적)	20	80
일반· 지방행정	▪ 공공데이터 개방(만개, 누적)	9.8	14.2
	▪ 청년 자립마을(개)	3	15